

## 反부패 사회 기대 ... 농수축산업은 '직격탄'

김영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빛과 그림자'

접대 관행 사라져 국가경쟁력 향상·경제성장 이끌 것  
음식업·유통업·육가공업 등 타격 ... 경기침체 불보듯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면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 구현'이라는 기대감 속에 '경기 침체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반(反) 부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향후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 도덕성 개선 등 큰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 미비와 일부 경제 부문의 위축, 사정당국의 악용 가능성 등이 공존하고 있어 당분간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 척결로 경제 성장 이끌 것=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외부 영향에 따른 정책결정 왜곡 또는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 사회 부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사회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결국은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만 올라가도 우리나라 연평균 1인당 명목 GDP가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 0.65% 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될 만큼 거시적 관점에서 부패 척결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국세두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각종 부패

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고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침체 불 보듯=지역 농수축산업은 직격탄=우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광주·전남 농수축산업계가 직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우 명절매출만 30~50%가량 줄어들고, 화훼 농가는 7000억 원 이상 타격이 예상되는 등 농수축산물 생산·유통에 '해폭탄급'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통업계도 선물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하고 있고, 지역 골프장들도 내장객의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한우의 명절(설·추석) 매출액이 2493억~415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우 선물세트의 99% 정도가 법에 저촉되는 5만원 이상인 탓이다. 명절 특수 매출증가분이 농가 총수입 4536억 원, 유통업체 3772억 원 등 모두 8308억 원인데, 소비감소로 인해 매출액이 30~50% 줄어드는 것이다.

삼겹살, 프라이드치킨, 햄·베이컨 등 육가공업에 대한 타격도 예상되고, 화훼·인삼 파해도 커질 것이라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사과·배 소득



한우 5만원어치 담아보니...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선물 5만원 내의 한우 선물세트를 광주 시내 한 고깃집에 의뢰해 제작했다. 일반적으로 15만원짜리 선물세트는 포장지와 아이스팩, 선물용 보자기, 택배비용 5000원을 추가해 포장 비용으로만 1만2000원이 쓰인다. 이 포장비용을 제외하면 5만원 이내 한우 선물세트는 가로 15cm, 세로 9cm, 두께 0.8mm 가량의 220g 꽃등심 두 덩어리만을 담을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감소액이 1500억~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인삼협회는 명절 선물세트로 소비 비중이 큰 인삼과 홍삼 등 가공품의 피해규모를 40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계가 김영란법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농수산물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 이 분석한 김영란법 관련 음식업계 추정피해금액은 8조 4900억원, 골프장은 1조1000억원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 세법개정안 확정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연봉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관련기사 10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교세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적용대상 400만명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율은 3개 단체 가운데 1개 단체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 말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

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

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외부 강요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

### 주요 쟁점별 헌재 판단

-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적용 = 합헌 (7:2)
-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 합헌 (5:4)
- 부정청탁 금지 조항 = 합헌 (전원일치)
- 금품제한 액수 대통령령 위임 = 합헌 (5:4)

- 이혼재의 세상만사 ▶2면
- 기아차 직원 차구입특혜 제동 ▶6면
- 신팔도유람-목포항구축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